

한·일·미가계의 소비구조 비교를 통한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 방향

A Comparison of Consumption Structures of Korean, Japanese and US
Households for Setting Consumption Standards of Korean Households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尹貞惠
인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成英愛

Dep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Professor : Jung-Hai Yoon

Dept. of Home Management, University of Inchon
Assistant Professor : Young-Ae Sung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소비구조의 비교분석 |
| II. 소비표준과 소비구조
정을 위한 제언 | V.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
정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onsumption structures of Korean households of 1991, 1993 and 1995 and compared them to those of Japan and US for setting consumption standards. The study also investigated if consumption structures of Korean and Japanese household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incomes and age of heads. It was found that the shares of the expenditures for food away home, personal transportation and education to total expenditures had been dramatically increased. It was also found that those shares were greater than those of Japanese and US households, especially for younger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highest income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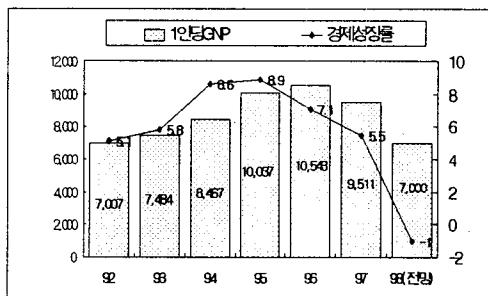
I. 문제의 제기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1995년까지 연평균 8.06%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압축고도성장을 하여 1995년에 1인당 GNP 1만 불을 달성하였으며 (그림 1),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의 한 국가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1996년 초반에 경기의 최고점을 통과한 이후 계속 경기가 후퇴하여 1997년 10월경에 최저점을 통과하리라 예측하고, 곧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중, 일반적인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대량실업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존재하는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IMF 체제 이후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많은 기업의 도산 또는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98년 3월 현재 실업률은 6.5%에 달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 가계는 주소득획득자인 가장의 실직, 높은 대출이자율, 높은 물가상승률,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가계가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가치 변화 또는 자원의 양적인 큰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적자 확충을 위한 이자소득세, 교통세·특별소비세의 인상 등 조세부담의 가중으로 가계가 체감하고 있는 생활물가는 지난 5개월 동안 급등하고 있으며, 98년 1월 이후는 계속 두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장래 소득의 불확실성과 가계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상황의 불투명 속에서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 자산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한 가계자원의 축소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는 소비지출의 변화를 통해 가계자원의 부정적인 변화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소비지출을 조정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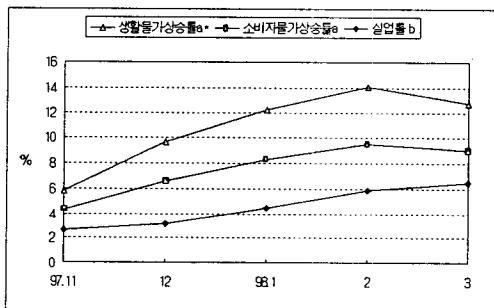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으로서 이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IMF 체제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기 직전 한국의 1인당 GNP가 1만 불에 도달한 시점인 1995년까지 개별 가계가 취해온 소비구조의 변

〈그림 1〉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GNP 추이



자료: 통계청(1997), 『한국 주요경제 지표』

〈그림 2〉 IMF체제이후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1998)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화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미 경제위기를 경험하여 거품이 빠진 일본가계와 한국가계의 소비구조를 1만 불 시점에서 비교해 보고, 소득계층과 연령계층별로 분석하여 보려고 한다. 일본가계와 한국가계와는 다른 소비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보다 발전된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가계와도 소비구조를 비교·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 위기상황에 대하여 가계가 취할 소비구조 조정의 방향을 모색하며, 한국가계의 균형을 이룬 소비생활의 표준설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II. 소비표준과 소비구조

표준이란 자원을 고려하여 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행동의 방향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표준은 행동으로 야기된 결과를 평가하는 데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가계를 운영하는 데 다양한 영역에서 표준이 설정될 수 있다(임정빈 등, 1994).

소비와 관련되어 설정되는 표준을 소비표준(standard of consumption)이라고 한다. 소비표준이란 도달하고자 하는 소비생활의 목표가 구체화된 것으로, 소비표준을 세운다는 것은 소비의 규모와 소비지출 비목간의 균형 있는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게 된다(Davis, 1945). 소비표준은 소비행동의 지침을 제공하여 주며 소비행동의 결과 한 시점의 소비수준(level of consumption)이 나타나게 된다. 즉, 소비수준이란 한 시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거나 누리고 있는 실제적인 소비생활을 나타내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소비수준은 소비표준으로 설정되었던 소비의 두 가지 측면인 소비의 규모와 소비구조로서 나타나게 된다(Davis, 1945). 이러한 소비수준은 소비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소비수준이 소비표준과 일치하면 만족감을 느끼나 소비수준과 소비표준의 불일치가 크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표준을 상황과 집단, 개인 또는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만족도와 관련해서 중요하다.

소비표준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경제환경요인이 표준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IMF 체제로 인한 감봉이나 실직, 이자율, 물가상승률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보유자원의 변화 등과 같은 것이 이러한 요인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 및 가계의 소비의 규모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소비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문화적 또는 집단적인 요인이 표준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나 개별가계가 속한 국가나 소득계층, 연령계층과 같은 집단은 소비표준을 설정하고, 결국 소비수준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행사한다. 이때, 현재 또는 과거의 사회전체나 집단의 준

거기준 또는 평균적인 소비행동이 개인 또는 가계의 소비표준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준예산(standard budget)의 역할이 주어진다. 표준예산이란 주어진 시점의 가격체제하에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량을 근거로 계산된 생활비이다. 이 때 생활에 필요한 재화량은 전문가들이 정해준 규범, 필수사항(예: 영양과 건강, 의복 등) 또는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수준 등을 기초로 산출해낸다. 표준예산은 보통은 ‘평균적인’ 생활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다. 또는 보다 다차원적으로 몇 가지 수준에 따라 제시되기도 한다. 예컨대 ‘빈곤선’, ‘저소득층가계의 표준예산’이나 ‘4인 가족의 표준예산’ 등이 그것이다(Suranyi-Unger, 1981). 한국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도시가계의 소비지출규모 및 구조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표준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소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및 과거의 소비규모와 구조에 대한 정보는 미래의 소비표준설정을 위해 중요하다.

셋째, 소비표준은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준예산은 전문가들이 정해준 규범이나 평균 등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다소 임의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Suranyi-Unger, 1981),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비표준을 평균적인 또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설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효과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관점에서의 소비표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인 배경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가계의 대응방식으로서 소비표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소비표준의 설정 중 소비구조의 재조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미래의 소비구조에 관한 조정작업은 과거 및 현재의 소비구조에 관한 정보를 갖고 시작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소비구조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개

인적인 특성에 따른 소비구조의 차이는 전국규모의 자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소득계층과 연령계층에 따른 추세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내용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개별가계의 소비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소비구조조정을 위한 표준설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목적을 제한하였다.

III.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이 연구는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변동을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 한국가계의 소비구조를 일본 가계와 미국가계의 소비구조와 비교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난 소비구조 변동의 특이점이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시계열 분석은 통계청의 1991, 1993, 1995년의『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였다. 둘째, 1인당 GNP 1만불 시점의 한일가계 소비구조의 비교를 위하여서는 통계청의 1995년의『도시가계연보』와 일본 총무청 통계국의 1984년도『가계조사연보』를 이용하였다. 셋째, 1995년도 한·일·미가계의 소비구조 비교와 한일가계의 소득계층별,

연령계층별 소비구조의 비교를 위해서는『도시가계연보』(한국),『가계조사』(일본)와『Consumer Expenditure Survey, 1995』(미국, Department of Labor)를 이용하였다. 이때 3국의 비교를 위하여 분석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로 제한하였고, 해당 연도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조사기간을 통일하였다.

3.2. 소비구조의 분석 연도와 선택근거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변동의 비교 연도는 1991년, 1993년과 1995년으로 하였다. 이 세 시점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의 소비변동을 살펴볼 수 있음과 동시에 각 연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은 우리 나라 1인당 GNP가 처음으로 1만불이 넘은 해이다. 그런데 IMF체제 이후 환율변동과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에 근거하여 예측된 바에 따르면, 1998년도의 1인당 GNP는 크게 감소하여 1991년도 수준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1991년의 1인당 GNP는 6,745불이다). 따라서 달리로 계산된 소득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인 1991년도의 소비구조를 되살펴 보고자 하였다. 1993년은 1991년과 1995년의 중간시점으로 소비구조 변동의 방향의 일관성을 보기 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일본가계의 소비구조와의 비교를 위해 선택한 연

〈표 1〉 소비구조의 분석 연도와 선택근거

분석 목적	분석 연도	선택 근거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변동	1991년	1998년도에 예측된 1인당 GNP가 유사
	1993년	1991년과 1995년의 중간 연도로 변동방향의 일관성 확인
	1995년	1인당 GNP가 1만 불인 시점
1인당 GNP 1만 불시점의 한일가계의 소비구조 비교	한국 1995년 일본 1984년	
1)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 비교 2) 한일가계의 연령계층별, 소득계층별 소비구조 비교	1995년	한국: 1인당 GNP 1만 불 일본: 경제의 거품이 빠진 시기 이후 미국: 동일 연도 선정

도는 일본의 1인당 GNP가 1만 불이 되었던 1984년이다. 또한 한국, 일본, 미국 3국의 소비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선택한 연도는 1995년이다. 그 이유는 이 시점은 한국의 1인당 GNP가 1만 불이 넘은 시점이며 일본의 경우도 1993년 이후 일본 경제의 거품이 걷히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경향이 출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김준환, 1998), 1993년 이후의 시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인 배경이 일본보다는 이질적이지만 한국의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가계의 소비구조를 같은 시점에서 비교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분석에 포함된 연도와 선택근거를 <표 1>에 요약하였다.

IV. 소비구조의 비교분석

이 장에서는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변동을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 한국가계의 소비구조를 일본 및 미국 가계의 소비구조와 비교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난 소비구조 변동의 특이점이나 문제점을 고찰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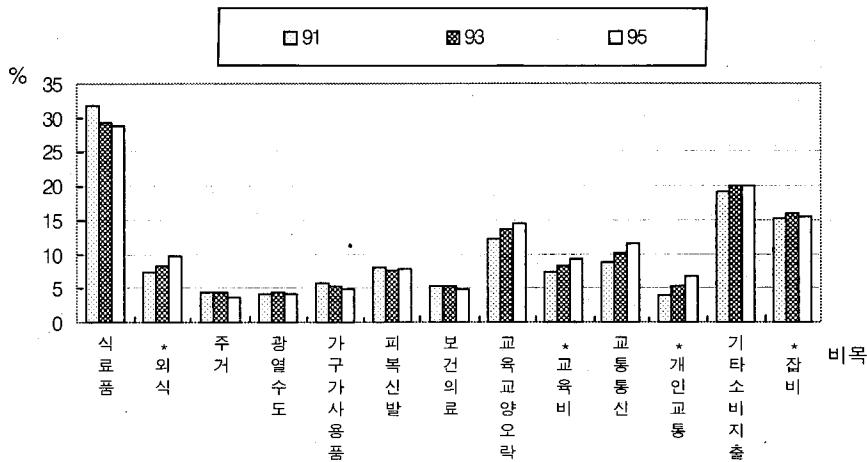
4.1.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시계열 분석(91, 93, 95년)

최근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 1991년, 1993년, 1995년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각 비목이 전체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이 때 소비지출비목은 9개로 분류된 원자료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비목에 따라 그 비목의 지출비중에 영향이 큰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먼저 1991년에서 1995년까지 소비지출구조에서 각각의 비목이 차지하는 지출비중의 절대적인 크기와 지출비중의 변동의 방향에 근거하여 볼 때 관심을 집중시키는 비목들이 발견된다. 3개년도 모두에서 지출비중이 가장 큰 비목은 식료품비이며, 기타소비지출이 2위, 교육교양오락비가 3위이고 교통통신비가 4위였다. 이들 중 식료품비의 경우는 지출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소비지출은 증가하다가 1995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교육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의 경우는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목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증가로 인하여 소비지출구조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의 폭도 비교적 큰 편이었다($31.8\% \rightarrow 28.8\%$). 그

<그림 3> 한국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비구조의 변동(91, 93, 95년도)



러나 식료품비에 포함되는 외식비를 살펴보면, 그 변동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외식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도에 7.3%에서 1995년도에는 9.6%로 증가하고 있고, 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중은 동기간 23.0%에서 33.3%로 증가하였다.

선택적 소비지출에 속하는 기타소비지출 비목에는 경조비와 관혼상제비로 구성된 잡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소비지출의 20%로 2위인 것은 한국가계소비의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기능과 체면소비 기능이 합하여져 상당히 높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본다.

교육교양오락비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2.3\% \rightarrow 14.4\%$). 이러한 증가는 이 비목의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비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991년도 교육비가 소비지출의 7.4%를 차지하던 것이 1995년도에는 9.1%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통신비의 경우도 그 비중이 1991년도에는 8.8%이던 것이 1995년도에는 11.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교통통신비를 구성하는 개인교통비의 증가에 기인한다. 개인교통비의 지출비중은 1991년에 3.9%, 1993년에는 5.3%, 1995년에는 6.7%를 기록하여 4년동안 지출비중이 1.7배가 되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과 컴퓨터 통신의 보급으로 인한 통신비용이 차지하는 지출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의 결과는 가계의 소득이 낮아진다면 한국가계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그러나 외식비, 교육비, 개인교통비의 증가가 현재의 소득수준에 상응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난 소비의 질적인 향상을 나타내주는 변화라면, 단순한 지출비중의 감소를 통한 소비구조의 조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소비구조의 질적인 향상을 나타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인지에 대한 대답을 줌으로써 소비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보다 확실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구하기는 어려우나 소비구조의 국가간 비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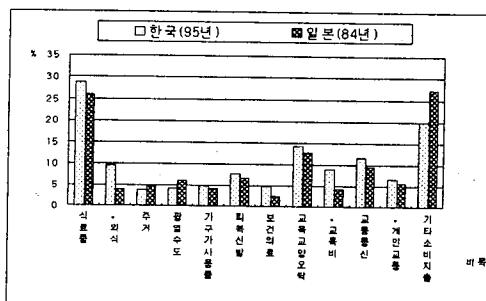
통하여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4.2. 소비구조의 국제 비교

1) 1인당 GNP 1만 불 시점의 한일가계 소비구조의 비교

〈그림 4〉는 1인당 GNP가 1만 불인 시점인 1995년도의 한국과 1984년도의 일본가계의 소비지출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1984년과 1995년 사이의 경제적 및 경제외적 변화가 매우 크고, 가격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간다는 점은 있지만 국가간 소비행동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1인당 GNP 1만 불 시점의 한·일
근로자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비교



9개 비목 중에서 한국가계가 일본가계보다 지출비중이 작게 나타난 비목은 주거비, 광열수도비와 기타소비지출이다. 특히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일본가계의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그 외의 6개 비목, 즉 식료품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에서 한국가계의 지출비중이 일본가계의 지출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식료품비 중의 외식비, 교육교양오락비 중의 교육비, 보건의료비의 경우, 한일가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GNP 1만 불 시점의 한국가계의 외식비 지출비중은 GNP 1만 불 시점의 일본가계보다 2.46배가 더 높았다(외식비; 한국 9.6% 대 일본 3.9%; 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중은 한국 33.3% 대 일본 14.9%). 교육비

의 지출비중은 2.17배(한국 9.1% 對 일본 4.2%),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은 2배이었다(한국 4.8% 對 일본 2.4%). 이상의 결과는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외식비, 교육비의 증가 추세의 어느 정도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2) 1995년도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 비교

1984년도와 1995년간의 한일가계의 소비구조의 비교는 이 기간동안 발생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비교연도를 동일시점으로 하고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우선 한·일·미 3국의 1인당 GNP(1995)는 <표 2>에서와 같으며 일본은 한국의 4배, 미국은 한국의 3배 가까이 된다. <그림 5>가 1995년도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5>를 보면 한국가계의 소비지출구조는 미국가계보다는 일본가계의 소비지출구조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문화적인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며 부분적으로는 자료수집에 이용된 비목에 대한 정의와도 관련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주택구입자금이 저량이므로 가계조사에서 유량으로서의 주거비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택상환채권에 대한 주택상환액이 유량으로 주거비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비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앞서 지적하였지만 3국간

의 가격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국가간의 비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림 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국가 중 한국가계의 지출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비목은 식료품비(외식비), 교육비, 페복신발비이었다. 식료품비의 경우 1995년도 한국의 소득수준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나타난 또는 가격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표 2>). 그러나 전체소비지출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3국中最 가장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95년도 한국가계의 외식비 지출비중은 9.6%로서 일본의 2.4배, 미국의 1.57배이었다(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중: 한국 33%, 일본 17.7%, 미국 38.1%).

한국가계가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의 지출비중은 9.1%로서 일본가계의 1.72배이며 미국가계의 5.06배이었다. 한국가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일본가계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었고, 미국가계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미국의 경우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공교육이 확립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가계의 페복신발비 지출비중은 일본과 미국가계의 지출비중보다 약간 더 높았다. 한국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은 일본가계의 1.77배이었다. 한편 한국가계의 가구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의 지출비중은 일본가계보다는 약간 높았고 미국가계보다는 낮았다. 기타소비지출의 경우는 일본가계의 지출비중보다는 낮았지만 미국가계의 지출비중보다는 매우 높았다.

<표 2> 한·일·미 3국의 1인당 GNP(1995)

(단위: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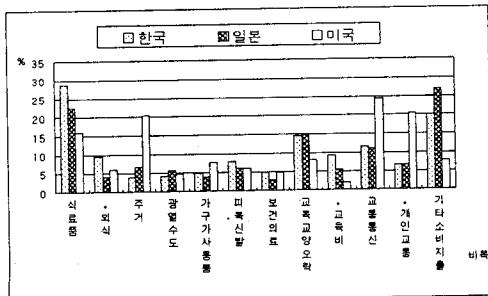
한국	일본	미국
10,076	40,895	27,536

자료: 통계청(1997), 『한국 주요경제 지표』.

3) 1995년도 한일가계의 연령계층별, 소득계층별 소비구조 비교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시계열 분석, 1인당 GNP 1만 불 시점의 한일가계 소비구조와 1995년도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

<그림 5> 1995년도 한·일·미 근로자가계의 소비구조 비교



과를 얻었다.

① 한국가계의 경우 외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등의 지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② 1인당 GNP 1만 불 시점에서 볼 때 한국가계의 지출비중이 일본가계의 지출비중보다 높은 비목은 식료품비, 외식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이었다. 특히 외식비, 교육비,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한일가계의 차이가 큰 편이었다.

③ 1995년도의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를 비교한 결과, 한국가계의 외식비, 교육비와 피복신발비의 지출비중은 한국가계가 일본·미국가계보다 높았다. 한국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은 일본가계의 지출비중보다 높았으며, 한국·일본가계의 기타소비지출 지출비중은 미국가계보다 매우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외식비나 교육비의 경우 증가추세는 단순히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구조의 질적인 변화라고 보기에는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증가는 어떤 소득계층 또는 연령계층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가? 1995년도 한일가계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목별로 소득계층과 연령계층별 소비지출 비중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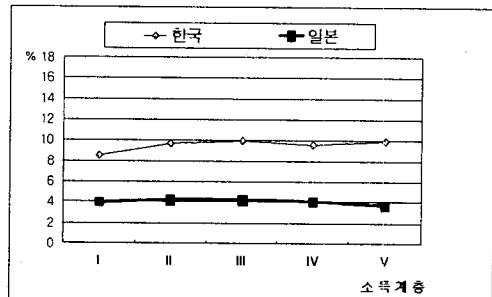
외식비

1995년도의 한일가계의 외식비 지출비중을 소득계층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그림 6>에서 보면, 한국가계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외식비의 지출비중도 약간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은 매우 작은 편이며 전 소득계층에서 한일가계의 지출비중은 일본가계의 2배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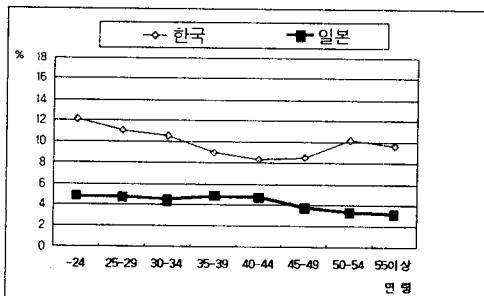
반면 연령계층에 따라 외식비 지출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한일가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 연령에 걸쳐 외식비의 지출비중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연령이 낮은 가계의 외식비 지출비중이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다가 50-54세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그림 7). 그 결과

한일가계의 차이는 연령이 아주 낮은 계층(3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과 아주 높은 계층(50대 이상)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가계가 일본가계보다 식품소비의 편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림 6> 1995년도 한·일 근로자가계의 소득계층별 외식비 비중의 비교



<그림 7> 1995년도 한·일 근로자가계의 연령계층별 외식비 비중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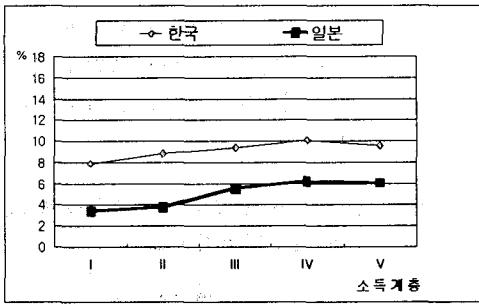
교육비

소득계층에 따라 교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중을 <그림 8>에서 살펴본 결과, 한일가계에서 모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의 지출비중이 증가는 경향을 보였고, 한국가계에서는 소득 4분위의 지출비중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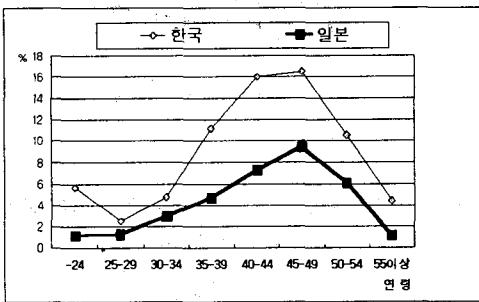
연령계층에 따른 교육비의 지출비중을 <그림 9>에서 살펴본 결과, 한일가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향을 볼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 지출비중이 증가하여 45-49세에서 정점을 보인다. 그 이후 교육비 지출비중은 다시 감소하는데 이러한 양

상은 한일가계가 같다. 그러나 한일가계의 중간연령 총 교육비 부담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40대에서 한국가계의 교육비 지출비중이 일본가계의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 8〉 1995년도 한·일 근로자가계의 소득계층별 교육비 비중 비교



〈그림 9〉 1995년도 한·일 근로자가계의 연령계층별 교육비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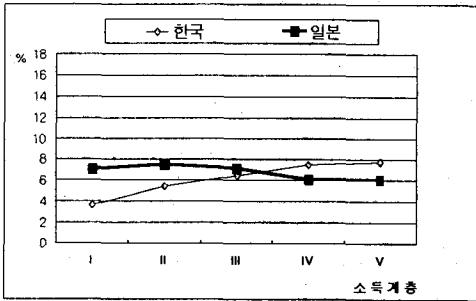
개인교통비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교통비 지출비중의 한일가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일가계를 소득계층에 따라 개인교통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중을 〈그림 10〉에서 비교하여 보면, 일본가계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교통비의 지출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한국가계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개인교통비의 지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 1-3분위 계층의 경우 일본가계의 개인교통비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나나 소득 4,5분위 계층의 경우 한국가계의 개인교통비 지출비중이 더 높았다. 한국가계의 경우 승용차보유 등의 개인교통비의 소득탄력성이 일본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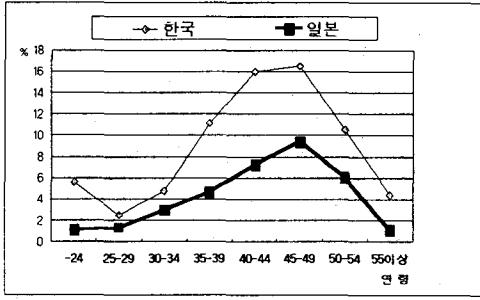
보다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일가계의 연령계층별 개인교통비 지출비중의 차이는 〈그림 11〉과 같다. 한국가계의 30대 초반과 50대 이후 연령계층의 경우 개인교통비의 지출비중이 일본가계보다 더 높았다.

〈그림10〉 1995년도 한·일 근로자가계의 소득계층별 개인교통비 비중 비교



〈그림 11〉 1995년도 한·일 근로자가계의 연령계층별 개인교통비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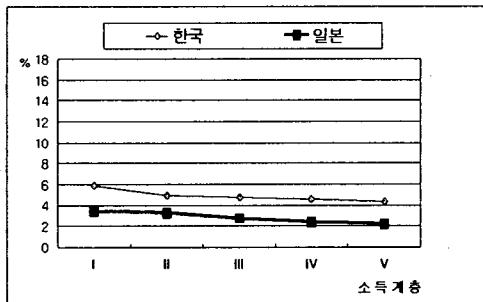
보건의료비

소득계층에 따른 보건의료비 지출비용을 〈그림 12〉에서 보면, 한국가계의 지출비중이 일본가계보다 대체로 일정한 정도 높았다. 그리고 한일가계 모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지출비중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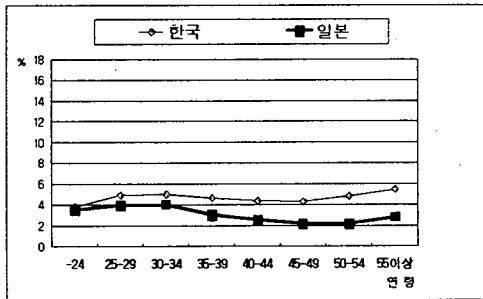
연령계층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을 〈그림 13〉에서 살펴보면, 한일가계 모두 곡선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연령에 따라 차이의 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가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다소 증가하다가 다시 줄어들고 45-54세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한국

가계의 경우는 연령계층에 따른 보건의료비 지출비 중의 변화의 양상은 유사하나 변동의 폭이 매우 작았다. 또한 연령이 낮은 계층보다는 연령이 50대 이상인 집단에서 한일가계의 지출비중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의료비는 거의 무료일 정도로 (최근 초진일 경우만 1,000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의료보장이 잘 되어 있으므로 보건의료비가 낮은 것으로 본다.

〈그림 12〉 1995년도 한·일 근로자가계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비중 비교



〈그림 13〉 1995년도 한·일 근로자가계의 연령계층별 보건의료비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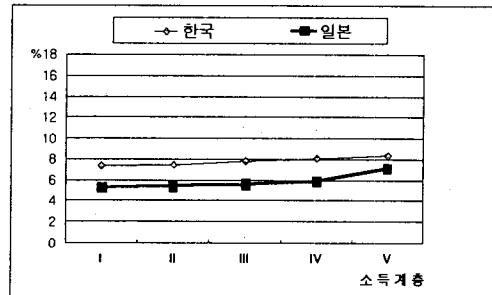
피복신발비

전체적으로 한국가계의 피복신발비 지출비중이 일본가계보다 높았다. 한일가계 모두 변동의 폭은 미미하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 지출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그림 13). 소득계층이 4분위에서 5분위로 상승할 때의 경우, 일본가계의 피복신발비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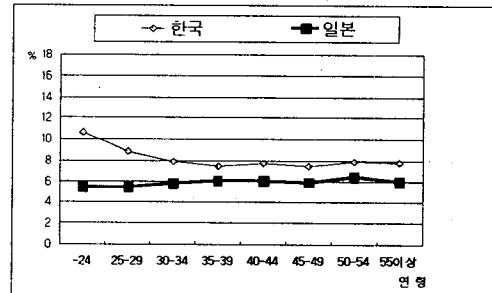
연령계층에 따른 피복신발비의 지출비중을 〈그림

15〉에서 살펴본 결과, 일본가계의 경우 연령에 따른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 반면 한국가계의 경우, 연령이 낮은 계층의 피복신발비 지출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한일가계의 피복신발비 지출비중의 차이가 20대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생의 소비문화에 대한 실증연구(손상희, 1996)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신세대들이 감각적, 외모지향적, 타인지향적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성향은 기업의 소비욕구 촉발과 맞물려 특히 한국가계에서 피복신발비의 높은 지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그림 14〉 1995년도 한·일 근로자가계의 소득계층별 피복신발비 비중 비교



〈그림 15〉 1995년도 한·일 근로자가계의 연령계층별 피복신발비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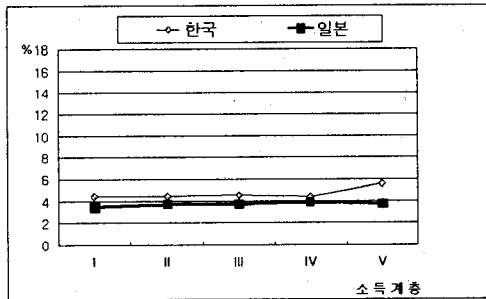
가구가사용품비

소득계층에 따라 가구가사용품비의 지출비중을 〈그림 16〉에서 살펴본 결과, 한일가계의 차이는 최고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성향은 고소득층의 소비의 증가 현상으로서 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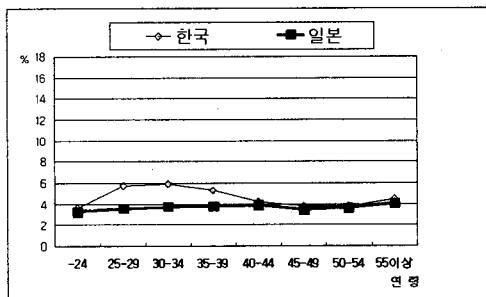
가구 또는 외제가구의 소비가 고소득층에서 주도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89-90년의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자산소득을 많이 획득한 고소득층의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얻기 위한 과시적 소비현상(성영신, 1998)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계층에 따라 한일가계의 가구가사용품비 지출 비용을 <그림 17>에서 본 결과, 한국의 저연령층(39세 이하) 가계의 가구가사용품비 지출비중이 일본가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가계에서는 주거면적이 협소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신세대가계의 소비지향적인 소비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6> 1995년도 한·일 근로자 가계의 소득계층별 가구가사용품비 비중 비교



<그림 17> 1995년도 한·일 근로자 가계의 연령계층별 가구가사용품비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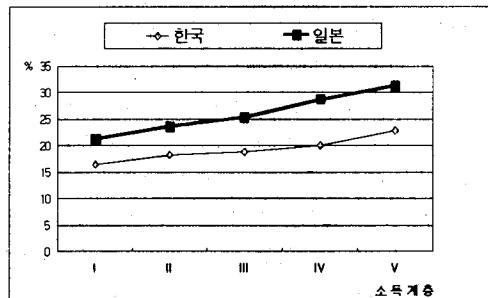


기타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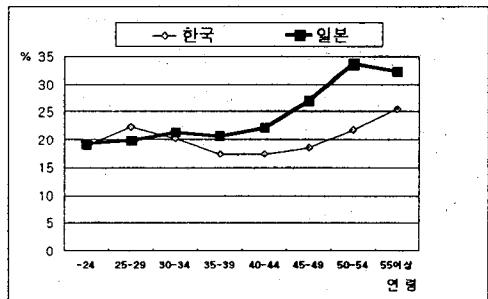
한일가계의 소득계층별 기타소비지출의 지출비중을 <그림 18>에서 비교해보면, 양국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한일가계의 연령계층별 기타소비지출의 지출비중을 <그림 19>에서 비교해보면, 일본가계에서는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연령이 많아질수록 지출비중이 급증했고, 한국가계에서는 4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연령이 많아질수록 지출비중이 급증했다.

<그림 18> 1995년도 한·일 근로자 가계의 소득계층별 기타소비지출 지출비중 비교



<그림 19> 1995년도 한·일 근로자 가계의 연령계층별 기타소비지출 지출비중 비교



V.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을 위한 제언

5.1 한국가계의 소비구조의 특징

한국가계는 1인당 GNP가 1만 불이 되기까지의 5년동안 외식비, 교육비, 개인교통비 등의 지출비중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세 비목의 지출비중의 급증추세가 과연 소비지출비목간의 균형을 통한 소비수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인당 GNP가 1만 불 시점에서의 일본가계(1984년)의 소비구조와 비교해본 결과, 외식비와 교

육비의 지출비중이 모두 일본가계의 두배를 넘었다. 또 한편 1인당 GNP가 1만 불 시점에서의 한일가계의 소비구조의 비교에서는 11년의 시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중진국의 소득격차가 2.7배에서 4배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계의 1인당 GNP가 1만 불 시점인 1995년을 기준으로 한·일·미 3국의 소비구조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가계의 외식비와 교육비의 지출비중이 3국 중에서 가장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전체가계의 평균적인 소비구조의 특징과는 다른 집단적 특성에 따라 소비구조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소득계층과 연령계층에 따른 한일가계의 소비구조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가계는 1인당 GNP 1만 불 달성 시점까지 외식비, 개인교통비의 지출비중을 높임으로써 편리한 생활양식을 보편적으로 추구하였다. 외식의 경우는 소득 1분위를 제외한 소득 2분위 이상의 가계에서 전반적으로 지출비중이 높았다. 반면에 개인교통비의 경우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선택성이 높은 성격을 갖는 소비지출 비목인 개인교통비, 가구가사용품비, 괴복신발비의 지출비중이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소비성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근로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의 구성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품경제 아래서 발생한 자산소득 획득계층의 과시소비 성향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20대, 30대의 가계에서는 외식비, 개인교통비, 가구가사용품비, 괴복신발비의 지출비중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최근의 신세대들이 집은 없어도 자가용을 타고 가족식당에서 외식을 즐기고 가구와 의복의 서구적인 유행을 받아들이는 등 “신빈곤층”이라 일컬어지는 소비생활 양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느 면에서는 소비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인 6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사람들로

서 태어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난을 모르고 물질의 풍요를 누린 젊은 세대가 생애소득에 비추어 볼 때 적정소비수준을 넘는 과소비(overspending)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선택적 소비지출비목의 과소비성향은 50대 초반의 가계에서도 외식, 가구, 개인교통비의 소비지출에서도 나타났다. 연령상 50대는 생애에서 잉여소득이 많은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의 과시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성향과 중복되는 효과라고 본다.

셋째, 미국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가계에서 혼상례와 관련된 경조비와 관혼상제비 등의 기타소비지출의 지출비중이 현저하게 높았다. 이것은 동양문화의 특성이 갖는 상부상조의 미덕이 계승되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고소득층일수록 기타소비지출의 지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면 과시적 체면소비성향이 많음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한국가계의 교육비 지출비중이 미국가계보다 5배 이상 정도로 높은 것은 한국사회의 입시위주의 교육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부담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교육비는 집합적 소비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개별가계에서 과중한 사교육비를 지출함으로써 다른 소비지출비목의 지출감소를 불가피하게 하여 가계의 소비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40대 가계에 지출비중이 과도하여 중년기 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 증가를 통한 소비수준의 질적 향상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소득 1분위부터 소득4분위에서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것은 입시에 대비하는 사교육에 집중투자를 할 수 있는 고소득층 가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확률을 높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자녀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섯째, 집합적 소비항목에 속하는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일본가계보다 높았고, 소득이 줄어드는 노인가계의 의료비 부담에 있어서 일본가계와의 격차가 매우 높았다. 이것은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노인가계에 대한 한국의 의료보장 수준이 낮기 때문

이다.

5.2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 방향

IMF 경제위기의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은 개별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장의 실적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단절과 장래소득의 불확실성, 고물가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 고금리 등의 현재의 경제환경의 변화는 고소득층에게는 자산소득의 증대를 가져다주는 반면, 중산층이하 가계에는 부채상환부담의 증가와 가계 파산 등의 경제적 고통을 지우는 등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경제위기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을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고려하여야 할 기본전제는 가계는 최종재의 수요자인 동시에 생산요소의 공급자로서 단순히 초절약소비로 소비를 감소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린 고비” 방식의 소비감소는 총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킴으로써 가계의 장래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도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소득의 감소와 장래소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개별가계 상황에 맞추어, 1년, 3년, 5년, 10년 정도의 단계적 장기 예측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적자가계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적정소비수준을 유지하도록 비효율적인 소비지출행동을 중심으로 소비구조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20대와 30대의 가계는 급격한 소득저하와 소득의 장기적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선진국의 신세대보다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개인교통비, 피복신발비, 가구가사용품비, 외식비 등의 소비지향적인 소비생활양식을 점검하여, 종합적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을 초과하여 과소비하고 있는 비목의 지출비중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비복간의 균형을 이를 수 있는 소비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고소득층의 고급승용차, 외제승용차 등의 개인교통비, 대형 TV, 외제 가전제품, 수입 가구 등의

가구가사용품비, 외국브랜드 수입의류 등의 피복신발비와 같은 과시소비성향은 90년대 초까지 축적이 가능했던 거품경제에서의 자본이득이 고소득층의 사치품 소비를 부추긴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과 학력수준에 합당한 적정소득을 기준으로 소비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가계의 혼례비와 경조비 지출비중이 미국가계의 2.5배 이상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상부상조의 순기능을 넘을 정도의 과다한 혼수, 호화결혼식등의 과시적 체면소비 요소는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표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한국가계의 교육비부담을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할 창의적인 인재 개발을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가계의 불필요한 교육비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여섯째,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 이외의 의료보장수준을 높임으로써 노인가계의 보건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준환(1998). IMF시대의 마케팅 4 전략.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보고서. <http://econdh.seri-samsung.org>.
- 성영신(1998). 한국인의 가치관과 소비 행동.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소비 전략. 한국가정생 활진흥회 제3회 심포지엄 자료집.
- 손상희(1996). 대학생의 소비주의적 성향과 영향요인. 대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2.
-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1994). 가정관리학. 학지사.
- 통계청(1998). 한국통계월보. 3월호.
- 통계청(1997). 한국 주요경제 지표.
-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1996). 도시가계연보 1995.
- 통계청(1993). 도시가계조사 30년.

- 매일경제(1998). 자주 쓰는 생필품 154개 대상 산출
소비자물가보다 체감물가 잘 반영. 1998.4.29.
- 매일경제(1998). 20대 실업 석달새 22만명 증가.
1998. 4. 27.
- 일본총무청통계국(1993). 가계조사연보 1992.
- 일본총무청통계국(1996). 가계조사연보 1995.
- Davis, J. S.(1945). Standards and Content of Living.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5, 1-15.
- Suranyi-Unger, T., Jr.(1981). Consumer Behavior and Consumer Well-Being: An Economist's Diges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132-143.
- U. S. Department of Labor(1997). *Consumer Expenditure Survey*, 1994-1995.